

재난지원금 논란...민주 “전국민 지급” 정부 “하위 80%만”

민주, 야당과 협의 통해 확대 김총리, 보편지급 주장에 난색 주말 당정회의 추가 논의 불가피 코로나 확진자 급증 새 변수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론'에 거듭 힘을 싣고 있지만, 정부는 '소득하위 80%' 지급안을 고수하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정하고 당 지도부와 협의하면 의원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토론하고 숙의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의회주의"라고 말했다. 또 "어제 정책위원회에서 추경안 관련 3시간 넘게 토론했다"며 "다수 국민의 소외와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2차 추경안을 처리하겠다. 수출·내수경계의 불일치를 정부의 적극적 역할로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다. 전날 의총에서 '전국민 보편 지급' 주장이 다수였던 점을 고려, 기재부가 낸 추경안의 틀에 구애 받지 않고 국회 논의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발언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의총에서 선별·보편 양측의 발제와 주장을 듣고 치열하게 토론했다"며 "의견 하나하나를 수렴, 예결위에서 제대로 논의하고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예결위 파트너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통해 지급범위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당 한 관계자는 "야당이 동의하면 전국민 지급도 가능할 수 있지만, 아직 우리가 맞박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소득 하위 90%' 절충안도 거론된다.

반면 정부는 당정간 줄다리기에 끝이 마려운 현 추경안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MBC 라디오에서 "예산은 총액이 정해져 있다.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게 되면 다른 부분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보편지급 주장에 난색을 표했다. 추경안 증액을 통한 전국민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자가 별로 없다"며 "그

렇다고 빛을 내는 것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BBS라디오에 나와 "당정 간에 충분히 논의해 (선별지급안) 합의한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은 이런저런 생각을 밝힐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당정 간 합의안에 충실하려고 한다"고 선을 그었다.

추경안 처리를 앞두고 당정간 견해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번 주말 고위당정 테이블에서의 추가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속한 증가로 방역에 비상이 걸린 것도 새로운 변수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취지가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경기 진작에 있는 만큼, 확산세가 누그러지는 상황을 보며 지급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영업제한 등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지원을 더 두텁게 하자는 요구도 나올 수 있다"며 "방역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부겸 국무총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처가 리스크’ 윤석열, 돌연 이재명 때리기

부인 박사 논문 부정 의혹 커져 점령군 발언 이어 김영환과 회동

야심 차게 대권 행보를 시작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잇따르는 '처가 리스크'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달 29일 퇴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어 대권 도전을 선언한 지 열흘도 채 지나지 않은 8일까지,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모 씨와 관련된 의혹이 줄을 잇고 있다.

가장 최근 불거진 것은 김씨의 논문 연구 부정 의혹이다. 김씨가 지난 2008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을 때 부정 의혹이 있었는지 쟁점이다. 학위를 수여한 국민대는 사안이 엄중하며 특별 조사에 착수했다. 결혼 전 사안이지만, 표절이나 도용

등 연구 윤리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씨의 표창장 위조 문제와 '뭇가 다르냐'는 식의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소위 '윤석열 X파일'이 두고두고 회자되면서, 윤 전 총장의 부정적 이미지는 쉽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부인 김씨가 과거 '출리'라는 이름으로 강남 유흥업소에 다녔다는 낯 뜨거운 의혹은 암암리에만 거론되다, 오히려 김씨의 군소 인터넷 매체와의 깜짝 인터뷰 해명을 계기로 제도권 언론 지면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장모 최씨가 지난 2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초유의 사태는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온 윤 전 총장에게 또 다른 치명타를 가했다는 분석이다. 일부 언론은 삼성전자가 한때 부인 김씨 소유 아파트에 7억 원 상당의 전세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것

과 별도로, 다른 시기 도이치모터스 간부와 특혜성 증권 거래를 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도 보도됐다.

윤 전 총장은 이들 신상 이슈에 거리를 두고 민심 청취를 위한 '윤석열이 듣습니다'에 매진하는 마이웨이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동시에 더불어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때리면서 시선을 돌리는 효과를 노리는 분위기도 있다. 이 지사의 최근 '미 점령군' 발언에 대해서도, 윤 전 총장은 "셀프 역사 왜곡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상식을 파괴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이 이날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진 김영환 전 의원과 만난 회동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야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보수층의 견고한 기대로 지지율이 빠지지 않고 있지만 윤석열 대세론이 휴가철을 넘길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김종인 “윤석열 막판 후보 단일화 나설것”

지지를 유지했던 현 상태 갈 수 밖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향후 거취와 관련, "현재 지지를 유지할 수 있다면 지금 상태로 가는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 막판 후보 단일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광화문 사무실에서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은) 굳이 지금 당에 들어가 다른 후보들과 육신각신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8월 경선버스 출발론'을 고수해온 이준석 대표가 윤 전

총장을 비롯한 모든 당 밖의 주자들도 제때 입당해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이 지금처럼 캠프 중심으로 행보를 이어가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일(11월 9일) 전후가 단일화의 마지노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일화 방식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 보경선 형태가 "공명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입당을 미룰수록 1초마다 손해'라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해서는 "그건 이 대표의 입장이고, 일방적으로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영덕 “R&D 예산 중 인문사회분야 1.2% 불과”

지난해 국가 R&D 전체예산에 비해 인문사회 분야 예산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이 지난 7일 오후 3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학술진흥 관련 법과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진행한 세미나에서 이같은 지적이 나왔다.

윤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류동춘 서강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병주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김진영 강릉원주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도승연 광운대학교 인제니움학부대학 교수, 박종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참여했다.

윤 의원은 "R&D 전체 예산 중 인문사회 분야 예산은 1.2%에 불과하다"며 "왜 기초학술이 중요한지, 국가 차원의 기초학술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구절벽, 뉴노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 커다란 변화의 파고를 뛰어넘으려면 인문학과 기술의 경계를 허무는 융복합이 필요하다"며 "사람이 없는 기술, 온도가 없는 기술은 인류의 미래를 밝힐 수 없다"고 기초학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 경선준비위 출범...대선 체제 가동

대변인단 4명 임명

국민의힘은 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선준비위원회(경선위) 인선안을 의결하고 대선 준비체제로 본격 전환했다.

당내 최다선인 5선이 서병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경선위를 이끈다. 부위원장은 한기호 사무총장이 맡는다. 두 사람 외에 9인의 경선위원도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원내 인사로는 당 밖 주자 영입 논의를 주도하는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성일홍 전략기획부총장이 합류한다. 재선의 이만희, 조선의 박수영-허은아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원내 및 외부에서는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이상욱 원장을 비롯해 직전 사무총장인 정양석 의원, 김재섭 전 비상대책위원,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경선위는 향후 예비경선(컷오프) 일정 및 횡수, 압축 배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국민의힘은 이날 토론회를 '나는 국대다'를 통해 선발된 양준우-임승호 대변인과 신인규-김연

주 상근부대변인 등 4인방을 임명했다. 이들은 141대 1의 경선투를 뚫고 황보승희 수석대변인과 함께 대변인단에 합류하게 됐다. 활동기한은 6개월이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홍행 대박'을 낸 토론회를 형식이 이어받아 정책공모전 '나는 국대다 시즌2-나는 국민의힘 정책대표다'를 연다. 정치, 경제, 교육·사회·문화, 국방·외교, 기타 등 5개 분야에서 이달 14~21일 정책제안서 공모를 거쳐 오는 23일 상위 30개 예산 경쟁팀을 추리고, 다음달 4일 본선 진출 10개 팀을 선발한다. 이어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순위를 결정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